

딜레마, 기회 그리고 대학의 역할

마린 우드(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스톡홀름지부 소장)

민주적 공간의 확장을 위한 대학의 역할

권위주의 통제가 확대되는 반면 시민의 공간은 축소되고 있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스웨덴의 민주주의 원조활동에 관한 최근의 평가는 대학을 비롯한 국가행위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¹. 더욱 강력한 지식사회는 민주주의 진보에 더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연구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은 국제인권증진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민주화 운동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시민과 민주주의 공간이 매우 제한된 국가에서 강의실은 여전히 개인적 의견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며 대학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합법적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교육(미래세대의 의사결정자 양성), 연구(유의미한 법률과 정책개발); 및 활동지원(소통플랫폼 제공).

개발도상국에서 학계와 교계 또는 학생들은 인권연구 수행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정부 및 시민사회 등 광범위한 청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연구성과와 그에 따른 권고를 발표할 기회도 거의 없다. 개도국의 학계는 과도한 교수부담과 빈약한 자원(제한적 인터넷 접속, 빈약한 도서관 예산, 교육용 장비부족, 출판업계의 기능상실), 연구기법과 지식의 부족,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교과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그리고 정부정책과 법률에 관한 학술적 비판에 대한 감시와 처벌과 같은 다양한 난관과 장애물에 봉착해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오늘날의 역량부족은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다수를 학살해버렸던 크메르 루즈(*Khmer rouge*) 시대의 결과물이다. 중국의 경우, 문화대혁명으로 붕괴되었던 기본적인 법치제도와 교육제도를 재건하는데 수 십 년이 소요되었다. 인권교육분야 등 각 분야에서 수준 높은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학문의 자유와 인권교육

학문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굳건히 하고 인권을 수호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문의 자유 원칙은 교육권(*right to education*)에서 유래한 것이며 사상의 자유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¹ The EBA Review 2020: 2019년도 원조연구분야 전문가그룹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from the Expert Group for Aid Studies for the Year 2019*),

https://eba.se/wp-content/uploads/2020/04/eba_%C3%A5r_2020_ENG_webb_uppslag.pdf

와 연관되어 있다. 이는 곧 아무런 제약 없이 가르치고, 배우며, 그리고 말하고 출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이러한 자유가 바로 고등교육의 요체이다². 교육, 교수 및 연구에 대한 권리는 고등교육기관의 학문적 자유와 자율성이 담보된 경우에만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교육 - 그리고 인권교육(HRE) - 은 또한 다른 종류의 인권 실현을 위한 핵심이다. UN은 인권교육이 예방적 도구, 역량강화 프로세스 그리고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서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모두 갖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인권교육이라 함은 인권원칙 및 인권가치에 부합하는 교육방법과 교수기법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역량강화 등 인권에 관한 지식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인권교육: 책임성 확보를 위한 내부로부터의 상향식 접근법

NGO 및 언론이 인권침해사례를 고발하는 방식과 다르게 인권교육은 “언론노출이 거의 없는 조용한 인권활동방식”을 취한다³. 눈에 띄는 방식으로 인권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여건 하에서도 낮은 강도의 인권교육을 위한 공간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면, 장애인의 인권, 아동의 인권, 사회-경제적 권리와 같이 정치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적거나 “민감하지 않은” 인권영역을 다루거나, 필요하다면 인권활동을 다른 이름으로 명명(예컨대, “인권교육” 대신에 “청소년 리더십 교육”)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전략을 통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주목도를 낮추고 인권을 정쟁의 소재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전략은 구사할 경우, 가장 시급한 문제나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위험도 상존한다.

반면, 인권교육자는 (교육자 자신과 학생에 대한) 기회와 위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계산은 타협, 자기검열, 콘텐츠의 정치적 프레이밍 그리고 극도로 제한된 여건에서도 인권교육을 가능하게 만드는 창의적 교육방법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비록 교과서는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출판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교사는 실제 수업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합리적 추론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 방점

² 고등교육기관의 학문적 자유와 자율성에 관한 리마선언(*The Lima Declaration on Academic Freedom and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https://www.wusgermany.de/sites/wusgermany.de/files/userfiles/WUS-Internationales/wus-lima-englisch.pdf>

³ Anja Mihr, Hans Peter Schmitz, “인권교육과 초국가적 인권활동(”*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nsnational Activism*)”, *Human Rights Quarterly*, Vol. 29, No. 4 (2007년 11월), pp. 973-993

을 둘 수 있다. 창의적 교수법을 통하여 그리고 실험적인 법률교육(역할극, 모의법정, 모의 국민참여재판), 학생들의 CSO 및 지역공동체조직 인턴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용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축소되는 공간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실현될 수 있는 사회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권리보유자와 의무부담자 모두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역량(동기, 권한 그리고 자원)을 보유하여야만 한다. 기실, 인권교육 역량구축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정치적 의지와 그것을 구축할 공간이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가장 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정작 정치적 의지가 가장 크게 결여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인권과 외국의 지원에 대하여 노골적인 적대감이 조성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를 두고,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전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은 우리가 “축소되는 공간”을 마치 자연 현상이나 천문현상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각국 정부가 억압적인 정책과 법률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공간은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공간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라지고 폐쇄되며 더 이상 들어설 수 없는” 공간이 되고 있다⁴. 국가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공간을 축소하는 상황 속에서 대학(혹은 다른 유형의 국가행위자)과의 파트너십 전략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정치에 대한 지원인가 독재정치에 대한 지원인가?

(비록 그들이 습득한 지식을 즉시 현실세계에서 활용할 수 없을지라도) 청년과 미래세대 지도자를 위한 인권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자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이는 곧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거시적 전략의 단편일 뿐이다.

경우에 따라, 상대국/수원국 정부의 탄압에 맞서려는 목적으로 표적제재조치와 개발협력중단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이 문제는 중국, 캄보디아, 터키 그리고 벨라루스에 대한 개발원조와 공동사업을 둘러싼 논쟁의 주제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국가행위자와의 인권협상이나 협력사업이 오히려 비민주적 정권의 만행을 못 본채 하거나 그러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용도로 이용될 위험성이 제기

⁴ <https://www.tni.org/en/topic/rethinking-shrinking-space>

되어 왔다. 것처럼 대학에 대한 지원이 자칫하면 민주정치에 대한 지원이 아닌 “독재정치에 대한 지원”으로 둔갑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스웨덴과 EU는 국립대학을 비롯한 국가행위자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개발협력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표적제재를 취할 동기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학에 대한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억압적인 정권 하에서 변화를 위해 애쓰는 인권 연구자, 교사 그리고 학생들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위험을 낳을 수 있다. 민주적인 공여국이 모든 국가행위자에 대한 개발원조를 중단할 경우에 발생하는 또 다른 부작용은 중국이 캄보디아에서 그 입지를 강화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비민주적인 정권에 대한 수원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전 세계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학문의 자유에 대한 독재정권의 영향력 확대라는 더 큰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영향력은 최근까지도 시민의 자유가 상당히 잘 보호되었었던 홍콩특별행정구역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감지된다⁵.

인권과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려면 세계는 집단적이고 제도화된 행동을 취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비민주적 정권 아래에 있는 대학과의 협력을 중단하지 않은 채 인권과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장기적 노력과 현지화

인권교육을 정착시키려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요구된다. 사회적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하여 신뢰,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게 된 사람들은 자국 정부에 압력을 넣을 수 있으며, 그러한 압력은 UN 및 국제 NGO와 같은 국제행위자에 의한 외부압력과 하향식압력을 보완할 수 있다⁶. 장기간에 걸쳐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오랜

⁵ Marina Svensson, Eva Pils, “학문의 자유: 대학은 중국정부에 맞설 것인가 공모할 것인가 (*Academic Freedom: Universities Must Take a Stance or Risk Becoming Complicit with Chinese Government Interference*)”, The Conversation, 2019년 6월 14일,

<https://theconversation.com/academic-freedom-universities-must-take-a-stance-or-risk-becoming-complicit-with-chinese-government-interference-118001>

⁶ 인권교육이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4가지 이유(*Four Reasons Why Human Rights Education is Key to Change*), <https://www.jus.uio.no/smr/english/about/programmes/news/human-rights-education.html>

권위주의 정권이 몰락한 후, 인권교육을 받고 성장한 젊은 지도자를 여러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인권교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 특히, 정권에 반하는 국외집단뿐만 아니라 현지의 교사와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와 인권교육을 받는 학생이 자국의 인권상황 악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